

##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역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

지난 금요일(2025. 12. 12)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빠’와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사이비역사’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역사’는 부정선거론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대선기간 이래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했다.<sup>1)</sup> ‘사이비역사’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아시아주의(대동아공영권)와 맞닿아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인사들이 일제의 대아시아주의를 모방해 ‘한민족의 위대한 고대사’를 주창하며 ‘사이비역사’가 싹텄다. 이들은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와 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를 옹호하는 국수주의적 이념을 제공했다.

『환단고기』는 이 과정에서 탄생한 위서(僞書)이다. 이 책은 고려 말~조선 전기에 저술된 여러 책을 수합해 1911년에 간행됐다고 하지만, 역사학계의 정설은 1979년에 이유립이 간행한 위서라는 것이다. 1911년 간행본은 확인된 바 없으며, 1922년에 출토된 <천남생묘지명>의 내용을 비롯해 ‘세계만방’, ‘원시국가’, ‘남녀평권(男女平權)’ 등 19세기 말 이후의 근현대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이비역사’는 역사학계가 『환단고기』를 역사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식민사학의 후예라고 비방한다. 그렇지만 위서는 말 그대로 ‘가짜 역사서’일 뿐 어떤 사료적 가치도 없다. 이는 조작된 증거나 위증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이비역사’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고대사 인식을 부추기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을 파고들며 영향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역사를 정치 도구화한 점, 비합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역사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 이들의 비학문적 주장은 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배타주의적 성향은 극우주의가 발호할 토양을 제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

역사학계와 ‘사이비역사’ 사이에는 어떠한 학문적 논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학계를 향한 ‘사이비역사’의 일방적 비방과 터무니없는 주장이 존재할 뿐인데, 이를 학문적

1) 2025년 5월 29일에 민주당, 7월 24일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10월 25일에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사이비역사학과 뉴라이트역사학’의 위험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논쟁이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실은 ‘환빠’나 『환단고기』와 관련한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역사학계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길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사이비역사’를 어떠한 형태로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사이비역사’를 지원하는 순간, 박근혜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엄청난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 국수주의와 극우주의가 만연한다면, 민주주의를 굳건히 다지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보수 정치인이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이 이를 옹호하거나 방관한 것과 달리, ‘사이비역사’를 비판한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비판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쟁적 발언이 아니라,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을 직시한 결과이기를 기대한다. 역사학계는 결코 ‘사이비역사’ 이슈가 여·야의 정쟁으로 소모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는 ‘사이비역사’에 우호적인 정치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이비역사’는 이들과 결탁해 국책기관의 연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편찬사업을 방해했다. 여·야 정치권이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을 깨달았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이비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아울러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고, 우리 역사를 깊이 성찰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중장기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역사학계와 고고학계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을 직시하라!
1. 이재명 정부는 ‘사이비역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마라!
1.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이비역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
1.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역사 정책 수립·추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라!

2025년 12월 17일

가야사학회, 강원사학회, 고구려발해학회, 고려사학회, 고조선단군학회, 공공역사문화연구소, 대구사학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백산학회, 백제학회, 부산고고학회, 수선사학회, 신라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영남고고학회, 일본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부고고학회, 청람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대중고고학회, 한국목간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생태환경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남사학회, 호서고고학회, 호서사학회

(이상 역사학계 및 고고학계 48개 학회)

# 성명서 발표 당일 동참 표명 학회 : 부경역사연구소, 웅진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이상 4개 학회)